

보도자료



K I H A S 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<https://kihasa.re.kr>

보도내용	□ 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제468호 발간 -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및 시사점		
상세문의	인구정책연구실	이지혜C 부연구위원	☎044-287-8470
	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	권성희 전문원	☎044-287-8282
배포부서	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장	이혜선	☎044-287-8345
	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	정지혜 행정원	☎044-287-8015
분량	총 3매		
배포일시	2026년 6월 15일(월)		
보도일시	즉시		

출생아 수 반등, 일시적 반등인가 구조적 변화인가

- 2024년 출생아 수 23.8만 명... 9년 만에 증가세 전환, 합계출산율도 2년 연속 상승
- 최근 반등 요인은 ▲30대 초반 여성인구 증가 ▲팬데믹 이후 지연된 혼인 회복 ▲30대 유배우 출산율 상승 등 인구구조와 혼인·출산율 행태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
- 출생아 수 반등을 제약하는 15~49세 여성인구 감소, 혼인·출산 연령 지연, 기혼 무자녀 비중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주목해야
- 최근 출생아 수 회복을 장기적 추세로 전환하려면 청년층의 주거와 고용 안정, 일·가정 양립, 돌봄·양육 지원 등 혼인과 출산이 이어지게 하는 구조적 여건 개선에 힘써야

※ “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. 한국보건사회연구원”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였으나,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통계(잠정)를 반영하여 재작성함.

※ 이 글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.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원장 신영석)은 『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』 제468호 <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및 시사점>을 발간했다. 연구책임자는 인구정책연구실 이지혜 부연구위원이다.
- 이지혜 부연구위원은 “이 글에서는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일시적 반등인지, 구조적 변화의 신호인지 파악하기 위한 인구학적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,

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.”고 밝혔다.

-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오던 출생아 수가 2024년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, 출생아 수 추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.
- 2024년 출생아 수는 23.8만 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전년 대비 소폭 상승(8.3천 명, 3.6%)했으며, 2025년에는 25.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.6만 명(6.8%) 증가했다.
- 합계출산율*도 2024년 0.75명(전년 대비 0.03명 증가), 2025년 0.80명(전년 대비 0.05명 증가)으로 상승했다.

*합계출산율: 15~49세 가임여성 1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

- 2015~2025년 출생아 수 시계열 분석 결과, 2024~2025년에는 2022년 이후 혼인 건수 회복과 함께 기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반등 흐름이 확인됐다.
- 인구학적 분해 분석 결과, 2024~2025년 출생아 수 증가는 주로 30대 유배우 출산율 상승과 30~34세 여성 인구 증가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25-44세 모의 출생아 수 기준, 2024년의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(8,499명)에는 30대 유배우 출산 행태 효과(+14,465명), 30~34세 인구구조 효과(+2,224명), 25~44세 무배우 출산 행태 효과(+2,679명)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. 그러나 25~44세 혼인상태 구성 효과(△8,532명)는 출생아 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.
- 2025년의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(16,292명)는 35~39세 출산 행태 효과(+9,109명), 30~34세 출산 행태 효과(+4,686명), 30~34세 인구구조 효과(+2,281명)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.
- 단기적으로는 출생아 수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, 반등의 지속성을 제약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도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.
- 긍정적 요인으로는 2030년까지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의 일시적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. 다만 최근 반등을 장기적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의 변화를 연계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

으로 제시됐다.

- 15~49세 여성 인구의 절대적 감소 추세, 혼인 및 출산 연령의 지연 현상, 기혼 무자녀 비중 증가 등이 향후 출생아 수 반등의 지속성을 제약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혼인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유배우 무자녀 여성 비율이 증가되는 등 혼인과 출산 결정의 연계가 약화되는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- 이지혜 부연구위원은 “최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반등은 의미 있는 변화이나, 구조적 추세 전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의 지속적 관찰과 추적 분석이 필요하다.”고 밝혔다.
- 이 부연구위원은 “특히 최근 반등이 일시적 회복인지, 가족형성 및 출산행태의 구조적 변화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, 연령별 출산율,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, 혼인건수, 유배우율, 유배우 출산율, 코호트 무자녀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.”고 설명했다.
 - 이어서 그는 “전체 평균의 변화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집단과 여전히 혼인·출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, 연령, 혼인상태, 출산순위, 지역, 소득·고용상태 등 집단별·계층별 심층 분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.”고 덧붙였다.
 - 그는 “최근의 30대 인구구조 효과 및 연령별 출산율 변화 효과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, 청년층의 주거·고용 안정, 일·가정양립, 돌봄·양육 지원 등 혼인과 출산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.”고 제언했다.

※ 이슈엔포커스 제468호 원문 보기

<https://repository.kihasa.re.kr/handle/201002/49703>